



고흥 우주체험센터 개관

청소년 우주체험 활동 기반이 될 국립 고흥청소년 우주체험센터가 21일 오후 고흥군 통일면 덕흥리에 문을 열었다. 개원식에 참석한 청소년과 관람객들이 무중력 우주적응장치 체험관에서 평형감각 적응훈련기구를 둘러보고 있다. /고흥=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대한민국 지방자치는 '3할 自治'

### 국가-지방사무 71대 29, 국세-지방세 79대 21...머나먼 지방분권

지방자치 15년을 맞았지만 대부분의 사무와 재정이 중앙정부에 예측돼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방자치단체에 권한과 책임을 충분히 주고 각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춰 정책과 사업을 실시해야 하지만 여전히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기준에 의해 지방자치가 좌우되고 있기 때문이다.

양하면서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 광주시와 각 자치구에 따르면 현재 겪고 있는 재정난의 근본 원인은 중앙 정부가 사회복지사무를 자치구에 떠넘기면서 그에 따른 예산 지원에는 인색하고, 재정권은 그대로 중앙정부가 가지면서 각종 사업에 시비나 구비를 포함하도록 한 데 있다는 것이다.

또 광주시와 각 자치구의 조례 역시 관련 법 제정이나 개정 때 따라 수정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조직 개편 및 인사 등과 관련해서도 행정

안전부의 승인을 거쳐야 하는 등 '말 뿐인 자치'에 불과한 형편이다.

재정 면에서도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79대 21로, 대부분 국고보조라는 미명 하에 갖가지 '꼬리표'가 붙어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강운태 광주시장은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일자리 창출에 27조를 썼다고 하는 데 광주시에 얼마를 때주고 일자리 창출에 쓰라고 하면 지역의 특성에 맞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의 상태라면 2할 또는 3할의 자치에 불과하며 중앙정부가 과감히 재정과 사무를 지방정부에 넘겨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오제일 지방분권추진위원회 위원(전남대교수)은 "중앙집권적인 정치·경제·문화구조가 변해야하고, 지방자치의 본질에 맞게 그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하지만 여전히 중앙정부나 국회의원들은 이에 대한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경·윤현석 기자 jkpark@

### 姜시장·朴지사 "한전 반쪽이전 안된다"

정부의 한국전력 판매부문 민영화 방침(광주일보 21일자 1면)과 관련, 광주시와 전남도가 정부 정책의 신뢰성을 무너뜨리는 조치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강운태 광주시장은 21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한전 판매부 분리계획은 시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으로, 정부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과

를 초래한다"며 당초 계획대로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에 한전을 온전하게 이전할 것을 촉구했다.

전남도 역시 이날 박준영 지사 명의의 성명을 내고 "한전 판매부문의 경쟁체제 도입(민영화)과 관련한 정부의 '전력산업구조개편안'을 수용할 수 없다"면서 당초 계획대로 이전할 것을 촉구했다. /홍경기·김지을 기자 redplane@

## 광주시-의회 첫 충돌

### 시의원들 "의회 경시 사과하라"...강운태 시장 "오해 풀어야"

광주시와 광주시의회가 출범 한 지 한 달도 안돼 갈등 구도로 치달으면서 향후 각종 정책 및 사업 추진과정에서 마찰이 우려된다.

〈관련기사 3면〉  
윤봉근 광주시의회 의장이 20일 임시회 폐회사에서 강운태 광주시장의 '일방통행식 정책발표'를 지적한데 대해 광주시 간부 공무원들이 반발하고 나서자 시의원들이 의원총회를 열어 강 시장의 사과를 요구하는 등 공방이 확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시의원들은 21일 상임위원장 회의와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시장 간부공무원들의 '광주시의장 폐회사 반박 보도자료'에 대해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보고 강운태 시장의 공식 사과와 해명을 요구하는 성명을 채택했다.

의원들은 성명을 통해 "의장이 폐회사에서 지역현안사업에 대해 언급한 것은 소통과 정당성 확보를 통한 정책수립을 집행부에 권유한 것인데도 간부 공무원들이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유감·실망'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의회의 견제 역할을 문제 삼은 것은 대의기관인 시의회와 145만 광주시민을 무시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이와 함께 ▲진상과약 후 의회 보고 ▲주도했던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조치 ▲재발방지 대책 등을 강 시장에게 요구했다.

광주시의회는 이러한 요구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향후 상임위원장 회의와 의원 총회 등을 다시 열어 논의키로 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의회에 대한 집행부의 유례없는 도전으로 묵과

할 수 없는 일" "대책위 구성을 통해 진상을 파악하고 적극 대처해야 한다"는 등의 강경발언이 쏟아졌다.

앞서 상임위원장은 "의회 경시, 시민 무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의견을 모았으나 일부 의원이 집행부의 대응 수위를 보고 결정하자고 반대해 대책위 구성은 보류됐다.

이에 대해 강운태 광주시장은 시의원들의 공식 사과 요구 등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 없이 시 간부들에게 "지금은 오직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할 때"라며 "서로 일부 오해가 있었으면 오해를 풀고, 앞으로 의회와 더욱 긴밀한 협조관계를 형성해 시민이 행복한 창조도시를 만드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DJ의 평화·희망' 국내외서 기린다

### 서거 1주기 맞아 8월10일~18일 추모행사 다양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 1주기(8월18일)를 맞아 국내외에서 고인의 업적을 기리는 다양한 추모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광주일보 17일자 1면)인 가운데 (사)김대중평화센터(이사장 이희호)가 행사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관련기사 3면〉  
(사)김대중평화센터(이사장 이희호)는 21일 다음달 10일부터 18일까지를 추모기간으로 정해 '평화·희망 그리고 김대중'이라는 주제로 국내외에 볼 수 없으며 지역민들 사이에서도 정부가 '반쪽자리 혁신도시'를 건설하려 하고 있다는 강한 실망과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전남도는 "한전 유치를 위해 광주시는 현재 한전의 이전규모 등을 고려해 다른 기관 유치를 포기하기까지 했는데도 정부가 한전 이전의 애초 약속을 어기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홍경기·김지을 기자 redplane@



이 기간동안 김대중 도서관 로비에는 분향소가 운영되며 관람객에게 김 전 대통령이 생전에 쓰던 집무실을 개방한다. 또 김 전 대통령의 삶과 사상을 재조명하는 학술회의(12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와 '민주주의와 평화의 트랜스포머'란 주제의 추모 강연회(16일 김대중도서관 컨벤션홀)도 열린다.

이밖에 1~15일에는 네티즌 카페 주관으로 경남 김해 봉하에서 광주까지 걷는 추모 도보순례가 진행된다. /김지을기자 dok2000@

학교설립 56주년 (1954~2010)  
믿음, 소망, 사랑으로  
커뮤니티 세상을 만드는  
젊은 지성인의 교육의 요람!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광 부 (062)605-1114  
대학문의 (062)605-1115

## 제주여행의 New trend!

초대형 여객선, 원도-제주 3시간

문의전화 **1688-2100**

www.familyexpress.co.kr